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용우



약사와 약장수는 어감으로 보면 매우 유사한 직종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둘 다 분명 약을 다루고 판매한다. 그런데 약사와 약장수를 받아들이는 문화와 감성의 차이는 관이하다. 두 직종을 가르는 가장 큰 이슈는 면허와 문제이다. 약사는 일정한 자격에 따라 주무관청의 면허를 받아 의약품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이를테면 전문 직종 종사자를 말하지만 약장수는 면허와 상관없이 있다. 약장수가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것은 이미 약장수가 아니다.

약사나 약장수나 둘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직업이지만 약장수는 오늘날 현대사회 들어 본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였다. 구식진 가락을 내세운 민담을 들을 기회도 적어졌고, 약장수의 서식적인 재래시장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약장수의 단골메뉴인 물보살을 동물의 거시기 등을 파는 행위도 보기 힘들어 진지 오래다. 약장수는 오래 전부터 역할보다는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져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과거 유사 인생 상담사이자 재간꾼으

약사와 약장수

는 하나 둘씩 없어져 이제는 약에 쓰기도 어렵게 되었다. 대신 약장수의 화술만 사회 각층에 퍼돌아다니면서 사회 곳곳에 유사 약장수가 창궐하게 되었다. 동네 어귀마다 각 직업별, 연령별, 세대별 약장수의 수가 부지기수이다. 의료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약사와 의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국민건강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약장수는 대중의 건강은 물론 절대요소까지 결핍한 엔터테인먼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안 되었지

만 인삼, 녹용, 뱀, 웅담을 팔고 성인 남녀들의 남녀 열혈 지사에 관하여 너스레를 떨던 시절의 약장수는 시장바닥의 명인들이었으며, 의약적 판단은 제쳐놓고라도 사회적 추억거리였다.

오늘날 약사와 약장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 만약 약사(pharmacist)를 약장수로 불렀다가는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많다. 진짜 약장수는 거의 소멸한 대신 직종별 유희적 약장수가 늘었으나 누구도 후자의 약장수로 불리기를 꺼려한다.

진짜 약장수는 기껏해야 지방의 서커스 정도를 구경 가야 한 두 명을 만날 수 있

키지만 약장수와 같은 인간 친화적이고 설명적인 직종은 하나 둘씩 사라져간다. 그 대신 약장수는 특정한 직업이라기보다 도처에서 약장수와 같은 기능자들이 약장수를 대신하고 있다.

과거 약장수의 말에 속아 인생을 망치거나 건강을 심하게 망친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기껏해야 약간의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효원이 적은 약재를 달여 먹고 후회한 정도가 최대의 피해일 것이다. 그 정도라면 약장수의 너스레에 대한 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듯한 화술이나 언어의 조작, 과장광고, 과대포장 등 현대사회의 약장수들이 뿜어내는 독소는 상상 이상이다. 전통적 약장수도 신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현대사회의 약장수는 신용이 최악이다.

진짜 약장수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 사회는 유사 약장수의 터전을 제공할 가공의 무대들이 생겨난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분별없이 너도 나도 약장수가 되어 간다. 정치인 약장수, 기업인 약장수, 예술인 약장수, 공무원 약장수, 노조원 약장수, 언론인 약장수, 법조인 약장수, 교육자 약장수, 지식인 약장수 등...

제발 진짜 약장수만큼만 되어라!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낙지 파동’ 서울시 아직도 판 소리인가

낙지 중금속 파동의 당사자인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달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를 때 실험에 쓰인 낙지 중 일부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일을 낙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낙지 데이(day)’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점심으로 낙지 요리를 제공했지만 먹물과 내장을 떼어내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자위대는 비난을 사고 있다. 어민들은 이날 행사를 두고 “어민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니 분노마저 치민다. 당초 서울시는 국내산 낙지 3건, 중국산 6건을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15배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로 직후 “1주일에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리터를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며 “음식이 해롭다고 하려면 수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의 성급한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실험대상으로 국내산이라고 밝힌 3건 중 1건이 중국산으로 드러나 검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낙지 머리는 안 먹는 게 좋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어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황의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는 서울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시장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수도로서의 본분을 찾는 길이다. 더 버티다간 오히려 명예만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응급의료 시스템 ‘빨간불’ 개선 서둘러야

흔하디 흔한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이 걸뚫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나 보호자의 대다수가 대학병원을 선호한다. 대학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를 제때 수용할 수 없게 되면 응급실은 응급실로 변질된다. 응급실은 응급실로 변질된다.

현재 국내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은 119 등이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면 응급의료장비 및 의료진에 여유가 있는 병원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체계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는 대학병원부터 찾고 본다. 특히 교통사고나 심근경색 등 화급을 요하는 환자나 농어촌 지역 환자일수록 같은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송 시간이 많이 걸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응급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장비 및 의료진이 확보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의 이송이 원

칙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119 등 대부분의 구급차는 환자가족이 원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이송 규정이 없는데다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거지는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병원들의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환자들은 몰려드는데 수용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응급 이송 및 의료진 투입이 가능한 병원으로 무조건 이송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과 지역 거점병원 등의 시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전효철

만산이 오색단풍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을에 산행은 커녕 걷기조차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 흔히 진료를 하다 보면 허리는 별로 안 아프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는 환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허리가 안 아프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없고 다리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리만 치료하려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병력을 자세히 물어보면 예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정도 받고 생활했는데 몇 달 전부터 허리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아프기 시작했다고 한다.

걷기 힘들면 척추관 협착증 의심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는 그런대로 견딜만한데, 걸으면 마치 다리가 저리고 터질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이상한 일은 그렇게 아프다가도 앉아서 조금만 쉬면 통증이 싹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2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걷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5분도 못 걸고 다리가 아파 쉬어야만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앉아 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관통은 데서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아프다면 먼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야 한다.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에 다리보다 내려가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고 고화질 MRI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진단

기고 유영복

중소기업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채용하고 육성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다. 인적자원이 기업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삼성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회장은 198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어느 연수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일생의 80%를 인재를 모으고 교육시키는데 보냈다. 삼성은 인재의 보고라는 말을 세간에서 자주하는데, 나에게 이 이상 즐거운 일은 없다.”

중소기업 미래는 교육에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재양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발전을 꾀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중소기업 역시 기업이다. 임직원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잘 안다. 하지만 교육환경 미비와 인력 부족, 그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의 문제로 임직원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각각의 중소기업에 맞는 묘수를 찾아내고 우수한 인재 확보와 선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교육의 효과는 작은 조직에서 더 큰 빛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교육은 효과가 크다. 그렇다고 교육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식물을 키울 때 물 한 번 준다고 성장을 담보할 수는 없

강진청자축제는 ‘경영축제’ 모범사례

올해 강진청자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민관이 합심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 그 중에서도 강진군 800여 공직자가 헌연일체가 돼 입장권 판매에 헌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 자부한다. 강진군 공직자에 의한 입장권 직접 판매액은 28억원이었다. 또 축제 개최로 인한 총경제유발효과는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광주일보가 지난 10월 19일자 기사에서 입장권 수입액이 1억 200만원인데 입장권 예매에서 공로를 세운 공무원들의 울릉도·제주·일본 연수비용이 1억 1200만원이라고 비판한 것은 잘못됐다. 무엇보다 연수비용이 사실과 다르다. 우리 군은 1억 1200만원이 아닌 8500만원을 연수비용으로 썼다. 입장권 수입액은 단순한 균정한의 수입일 뿐 실제 축제개최에 따른 강진군 전체의 경제효과는 35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면 1억원 정도 벌어들인 해이여행에 썼다는 식의 비판은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축제를 통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올 초 축제 전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 실적 우수자에 대해 해외연수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도 밝혀두고 싶다.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 실적이 전년보다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본다. 혈세를 낭비했다기보다는 경영마인드로 지역 축제를 활성화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된다. ▲박석환·강진군 축제경영팀장

無等鼓

아시아게임이 열릴 중국 광저우시에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합부로 식칼을 살 수 없게 된다. 공안당국이 지정된 업체에 가서 신분을 등록한 뒤 칼을 구입하도록 한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칼 구입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판매한 칼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록해 일주일에 한 차례 경찰서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주부들이 쓰는 부엌칼을 총포와 같은 인마살상용 테러 무기로 격상시킨, 이른바 ‘식칼 실명제’라 하였다. 중국에서 ‘식칼 실명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지난해 9월 건국 60주년 기념일 앞두고 ‘칼

이 심복하다. 정부가 다음달 11~12일 G 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VIP 이동경로의 돌풍까지 미리 치우는 특급 경호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5년의 경호를 강남·용산·종로 등지에 집중 배치하고, 외빈 차량에 들어갈 배를 우려해 자갈 하나까지 청소하는 철통 같은 경호·경비 작전이다.

식칼 실명제

한 나라당은 한 술더 뜨자고 난다. 현행 ‘G 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만으로도 경호안전구역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되는데,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의가 집회와 시위의 영향에서 벗어나성 부림 사건’이 따르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상하이시도 최근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식칼 실명제’를 실시했다. 대규모 국가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생활필수품 구입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독자투고 환영합니다